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 해설

1. ④ 2. ④ 3. ⑤ 4. ④ 5. ③ 6. ③ 7. ① 8. ② 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⑤ 14. ①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② 20. ②

### 1. 법이념의 이해

**정답 해설** (가)는 법적 안정성, (나)는 정의이다.

ㄴ.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취득 시효 제도이다. 이것은 진실한 권리 관계보다는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다.

ㄷ. 손해 정도에 따른 배상액 산정은 배분적 정의, 1인 1표의 선거권 부여는 평균적 정의로서 모두 정의와 관련된다.

**오답피하기** ㄱ.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는 법언은 합목적성과 관련된 것이다.

ㄷ.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법이 구체적으로 제정·실시되는 원리는 합목적성이다. 합목적성은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으로, 국가나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2.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의 이해

**정답 해설** 밑줄 친 ‘원칙’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다.

④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는 법언은 권리 행사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어떤 행위가 권리 남용일 경우 그 권리 행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권리 행사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권리가 남용되어 행사될 경우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③ 권리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비교하는 등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민법상 능력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가)는 권리 능력, (나)는 행위 능력이다.

⑤ 행위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권리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행위 능력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오답피하기** ①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된다. 자연인은 살아 있는 사

람을 뜻하므로 사망한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 부재자는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사망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 능력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② 권리 능력은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므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③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사 능력의 유무이다.

#### 4. 기본권 구제 방법의 이해

**정답 해설** ④ 헌법 소원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헌법 재판소에 최종적으로 그 구제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갑은 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을이 국가가 아니라 사인(私人)이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법률 상담이나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이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은 을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③ 을의 인격 모독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에게는 청원권이 있으므로 갑은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

#### 5. 기본권의 종류와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평등권, (나)는 자유권, (다)는 참정권, (라)는 청구권, (마)는 사회권이다.

③ 자유권은 절대 군주에 항거하여 최초로 획득한 권리로서 근대 시민 혁명 직후부터 강조되었지만, 사회권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 등장과 함께 중시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② 평등권과 자유권은 국가 성립 이전의 권리로서 천부인권성이 강하지만, 참정권은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권리로서 헌법 규정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열거적 권리이다.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 6. 법 해석의 방법 이해

**정답 해설** 나. 문리 해석은 법문의 문자와 문장을 사전적(辭典的)·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갑은 ‘개는 출입 금지.’라는 규정을 ‘개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문언의 의미대로 해석하였으므로 문리 해석에 해당한다.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된 법규를 발견하고 이를 해석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

다. 논리 해석은 입법 취지나 전체적 문맥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추리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을은 ‘개는 출입 금지’라는 규정을 쾌적한 공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원을 훼손할 수 있는 고양이의 출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므로 논리 해석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가. 당연 해석은 입법 취지를 중시하여 법조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갑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안내판의 문장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였다.

르. 개와 고양이는 반대 개념이 아니므로 을의 해석은 반대 해석이 아니다. 을은 쾌적한 공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출입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논리 해석 중에서 당연 해석에 가깝다.

#### 7. 사실혼 부부의 법률관계 분석

**정답 해설** 가.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사실혼 부부라도 정조·동거·협조·부양의 의무와 부부 간 일상 가사 대리권은 발생한다.

나. 갑이 쌀을 구입한 것은 일상 가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병은 을에게 외상값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다. 갑과 을은 사실혼 부부이므로 이혼 시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

르. 사실혼 부부에게는 상속이나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8. 행정 구제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가. 갑은 공공 영조물인 ○○국도의 관리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에 대해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상 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 관계 당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을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므로 을은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보상이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나. 갑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아니라 공공 영조물의 관리 하자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르. 관계 당국의 토지 수용 행위가 위법하다면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 9. 유언과 상속의 관계 분석

**정답 해설** : ⑤ 갑이 B보다 먼저 사망하면 갑의 사망에 대해 상속인은 병, A, B이다. 유언의 효력이 없으므로 갑의 재산 7억 원은 병에게 3억 원, A와 B에게 각각 2

억 원씩이 법정 상속된다. 이후 B가 사망하면 B의 재산 2억 원은 직계 존속 병에게 상속되므로 최종적으로 병이 5억 원, A가 2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①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생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A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친양자 입양은 효력이 없다.

②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내용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해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은 갑의 서명과 날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③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했을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되어 병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갑과 B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므로 갑과 B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갑이 한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갑의 재산은 배우자 병과 직계 비속 A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 10. 물권의 종류 이해

**정답 해설** (가)는 소유권, (나)는 용익 물권, (다)는 유치권, (라)는 저당권이다.

ㄴ. 용익 물권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ㄷ.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공시한다.

**오답피하기** ㄱ.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점유권이다. 소유권은 사실상 점유와 관계없이 그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권리이다.

ㄷ.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폐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 11.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가)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이다.

ㄱ.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는 환경 분쟁에서의 손해 배상액 산정뿐만 아니라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ㄴ.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인과관계 입증 등을 대신 해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해준다.

**오답피하기** ㄷ.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ㄷ.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설정이나 배출 시설의 허가제는 해당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 12.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정답 해설**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으로서 모두 국제법의 법원이다.

ㄱ.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간에 문서로 작성된 국가 간 합의로 협정 당사국만 구속한다.

ㄷ. 국제법은 국제 사회 및 국제 조직, 국가 간의 관계, 국제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ㄴ.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가 법으로 승인하고 준수하는 여러 국가의 관행으로서 사실상 승인하고 준수하면 된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다.

ㄹ.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데, 이때의 국내법은 대체로 국내의 법률을 의미한다. 조례는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므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국내의 조례에 위배되더라도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적용된다.

### 13.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사례 분석

**정답 해설** ㄷ. 갑이 을을 부당하게 공격했고, 을은 갑에 의해 떠밀려져 병의 노트북이 파손된 것이다. 즉 병의 노트북은 갑에 의해 파손된 것이므로 을은 노트북 파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병은 을을 구하기 위해 갑을 붙잡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므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오답피하기** ㄱ. 갑의 반격 행위가 정당 방위가 되려면 병이 부당하게 갑을 공격했어야 한다. 그런데 병은 갑이 부당하게 을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을을 구하기 위해 갑을 붙잡은 것이므로 병의 행위가 정당 방위이다. 이 과정에서 갑이 병에 반격한 것은 위법성이 있으므로 정당 방위가 아니다.

ㄴ. 갑은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이 있으므로 민법상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갑의 부모는 책임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을에 대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14. 형사 소송 절차의 이해

**정답 해설** ① A는 구속 적부심이다.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인 갑이 기소되기 전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B는 보석으로서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 신분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로서 수사 받는 중에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갑은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④ 갑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회 봉사 및 수강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⑤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이다.

### 15. 성년의제의 이해

**정답 해설** ③ 을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2년 4월 5일에는 만 19세로서 미성년자의 연령이지만 혼인을 했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을은 행

위 능력자이므로 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을의 부모가 취소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12년 4월 5일에는 만 18세로서 근로 기준법상 연소자가 아니므로 연소자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갑을 보건상 또는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 근로시킬 수 있다.

② 2012년 12월에는 갑이 만 19세로서 선거권을 가진다.

④ 을은 몸싸움 당시 만 19세로서 소년법 적용 연령이 아니므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⑤ 갑이 술을 마신 날은 2012년 4월 6일로서 만 18세이나 그 해 5월 5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201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 16.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이해

**정답 해설** A법률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⑤ 이 법률은 사회법으로서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강화한다.

**오답피하기** ① 부당한 공동 행위란 담합을 뜻한다. 이 법률에 따라 3개 회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②, ③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은 사업자의 횡포로서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법이다.

④ 사업자가 독점이나 담합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국민 경제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 17. 단체 협약의 이해

**정답 해설** ③ 단체 협약은 노사 간의 계약적 행위를 전제로 하여 탄생하는 자치 규범이므로 개별 근로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지 않아도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피하기** ① 단체 교섭권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노동 쟁의에서 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④ 쟁의 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 행위는 불법이다.

⑤ 적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8. 법의 분류 이해

**정답 해설** A법률은 형법, B법률은 군형법이다.

⑤ 형법에 비해 군형법은 특별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일반법인 형법이 개정되더라도 군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군형법이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①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 시가 아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해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제2항에 의해 예외가 존재한다.

② 군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군인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법을 만들 당시에 군인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므로 입법 해석에 해당한다.

③ 형법은 제2조에, 군형법은 제1조 제1항에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④ 형법과 군형법은 모두 공법으로서 국가가 법정 주체의 당사자이다. 또 형벌권의 행사라는 공권력 관계를 다루고 있다.

## 19. 범죄 성립의 요소 이해

**정답 해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모두 필요하다. A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B는 책임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C는 범죄 행위이다.

②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말리다가 다치게 한 것은 정당 행위 혹은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농아자로서 책임성이 감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③ 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자신의 지갑을 훔치는 사람을 제지하는 것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방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자로 때려 중상을 입힌 것은 과잉 정당 방위로서 범죄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⑤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20.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사례 분석

**정답 해설** 갑은 공작물 소유자, 을은 공작물 점유자, 병은 을에게 고용된 종업원, 정은 행인으로서 피해자이다.

② 병이 간판을 손질하다가 과실로 떨어뜨려서 정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병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을은 병의 사용자이므로 병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을이 병의 선임, 감독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공작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만일 공작물 점유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③ 병의 과실로 정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병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다만 과실이 경미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④ 을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서 병의 불법행위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